
'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 1. 2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목 차 ||

I . 2017년 성과와 반성	1
II . 2018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5
III . 2018년 중점 추진과제	7
1. 기록전문가가 선도하는 기록관리 혁신기반 구축 ..	9
2. 디지털 환경에 지속대응 가능한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	12
3.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체계적 수집·보존	14
4.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서비스 환경 조성 ..	16
5.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 및 서비스 확대 ..	18

I . 2017년 성과와 반성

1. 2017년 정책성과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운영을 통한 혁신방안 마련

- 외부전문가(안병우 위원장 등 14명), 기록원 지원팀(9명)으로 구성, 운영(9.13.~12.31.)
- TF 전체회의(9회)·분과회의(25회) 개최, 혁신방안 최종보고서 작성

분과	주요 과제 및 내용
1분과 국가기록원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록관리 폐단(11과제*) 기록 검토·면담을 통한 사실조사 *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논란, 제18대 기록물 지정이관, 4대강 영상기록 등 ▪ 국가기록관리 체계, 기록원 조직·기능 등 혁신방안 마련
2분과 공공기록관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영역* 8대 과제(세부 23개) 혁신방안 마련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기록정보 공개·공유 확대
3분과 대통령기록관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관리 7대 과제*(세부과제 18개) 혁신방안 마련 * 지정보호제도 개선, 생산기관 기록관리 개선, 디지털기반 대통령 기록관 모델정립, 대통령기록관 운영의 전문성·중립성 보장방안 등

□ 주요 기록물의 차질 없는 이관 및 관리

- 중앙행정기관 등이 생산한 보존가치 높은 기록물 수집
 - ※ 전자문서('06년 생산분) 약 320만 건, 비전자문서 160만 건(8만 권), 시청각기록 1만 점 등
- 18대 대통령기록물의 차질 없는 이관 및 조기 정리·등록
 - 2차에 걸쳐(1차: 4.17.~5.9. 2차: 5.12.~19.) 총 11,145,545건 이관·등록(10월)
 - ※ 지정: 204,759건, 비밀: 1,098건/비전자: 1,761,460건, 전자: 9,384,085건
 - 제19대 대통령비서실 발견 전임정부 기록물 추가이관 및 정리
 - ※ (소위 캐비닛문건) 3차(7.14., 7.21., 7.28.) 27박스 분량 이관(381철 4,386건)
 - (전산 공유파일) 9.11. 외장하드 8개(복본 16개) 4.3TB 이관(파일 377만여개)
- 해외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본격 수집·정리
 - 일제강점기 강제이주, 강제연행, 위안부 등 과거사 관련 기록물 수집
 - ※ 우즈벱·카자흐스탄 소재 고려인 강제 이주 영상(선봉)·사진(141점), 일제강점기 강제연행(군함도 등) 문서·사진(145,011매), 위안부 관련 문서(3,290매) 등
 - 6.25전쟁, 전후 원조, 1950~60년대 한국생활사 관련 기록물 약 38천매 수집

□ 디지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개선

-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R&D 사업* 추진 및 이행계획 수립
* 법·제도 개편방향, 프로세스·시스템 재설계,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지능형서비스 모델 제시 등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및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안)* 수립
* 기록관리 절차별 내용 구체화, 법·표준 개정사항 도출 등
- 클라우드 업무환경 변화에 맞는 기록관리체계 개발 및 적용
※ 클라우드용 기록관리시스템(CRMS) 개발 및 행안부 시범적용, 중앙부처 15개 기관 전환

□ 주요기록물 보존·복원 및 기록정보자원의 안전한 보호 정착

- 주요기록물 보존·복원 및 전문역량 강화
 - 세월호내 침수·훼손 기록물, 국무회의록(1949년), 우장춘 박사 연구 노트·식물표본(1930년대), 손기정 영화필름 등 보존·복원
 -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시청각 등 분야별 역량 강화 및 관학 협력 추진
- 국가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 개소(1.12.) 및 자체 보안관제 체계 정착
※ 사이버위협 자체탐지·분석 및 차단 등 총 342,599건(2017.1.~10.) 처리

□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 비공개기록물 15만권(1,345,903건) 공개재분류 완료
※ 재분류결과 : 공개 134,587건(10%), 부분공개 979,025건(72.7%), 비공개 232,291건(17.3%)
-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통한 기관간 자료제공 간소화(11.6.~)
※ 보훈·안장 자격심사 등을 위한 행형 기록 제공(국가보훈처, 대전현충원)
- 소장기록물 원문서비스 강화('17년 지적원도(전남·북), 시청각기록물 등 약440만건)
- 다양한 기록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
※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등 콘텐츠 개발 및 확대(7개)
- 근·현대 주요기록물을 활용한 자료집·정책해설집 편찬
※ 「근대 사법 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주요정책기록 해설집(교육편, 교통편)」, 「기록과 테마로 보는 대한민국(생활편)」 발간

2. 반성 및 보완

□ 기록물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기록원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 국회·학계 등에서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독립성·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문제 지속 제기
 - 주요 정책 수립·시행, 국책사업 등 국정 수행 과정 기록물의 부실 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흡
- ⇒ 조직혁신 및 공공·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등 기록원의 독립성·중립성 강화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개선 필요

□ 기록관리 현장·학계·단체 등과 협력·소통 미흡

- 기록관리 현안에 대한 학계·단체와 소통 부족 및 현장 경험이 반영된 정책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미흡
 - 기록관리 연구·기술 이슈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부족
- ⇒ 현장과의 교류 확대 및 소통 창구 마련, 연구개발 분야 국내외 학회 참여·발표, 연구단체 등과 교류협력 활성화 필요

□ IT 환경변화에 따른 전자기록관리 전문역량 개발시스템 미흡

- 전자기록시대에 요구되는 인력양성,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미흡
- 전자기록관리 전문강사 부족, 교육실습을 위한 시스템 미흡 등
- ⇒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의 전자기록관리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중장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반 구축 필요

□ 이용자 중심으로 기록정보서비스의 전환 요구

- 시대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콘텐츠 구축으로 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새로운 주제 발굴에 한계
 - 해설집·자료집 등 학술에 편중된 공급자 중심의 편찬
- ⇒ 주제 중심에서 소장기록정보 검색편의 중심으로, 사회변화 소개에서 정책·제도 시사점 제시 중심으로 콘텐츠 영역 확대 필요

Ⅱ .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018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정책여건

- 국가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서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으로 추진 동력 확보**
*(8-1 혁신적인 열린정부) "국가기록원 전문성 강화 및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존의 '문서'를 대체하는 '**데이터**', '**업무정보**'로서의 **전자기록관리체계 전환** 요구
*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도래, 高가치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수요 증대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생산단계의 체계적 통제** 필요성 대두
-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기록전문가들의 **혁신 요구** 및 일반 국민의 **관심도 증가**

□ 정책방향

목 표

혁신적인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추진 방향

- 기록관리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제도 기반 구축
- 디지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록관리체계의 선제적 개선
- 국정 수행과정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기록관리 절차 강화
- 기록공개 및 활용 촉진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활용 확대

Ⅲ . 2018년 중점 추진과제

< 중점 추진 과제 (요약) >

1. 기록전문가가 선도하는 기록관리 혁신기반 구축

과제 1. 국가기록원 조직혁신으로 독립성·전문성 강화

과제 2. 국가기록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

과제 3. 기록관리 현장과 소통·협력 강화

2. 디지털 환경에 지속대응 가능한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과제 1. 전자기록관리체계 고도화 중장기 전략 수립·시행

과제 2. 클라우드 RMS(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보급

3.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체계적 수집·보존

과제 1.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및 체계적 수집·관리

과제 2. 기록물의 장기보존 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강화

4.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서비스 환경 조성

과제 1.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및 정리·기술로 서비스 확대

과제 2. 민관 협업 기반의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및 제공

5.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 및 서비스 확대

과제 1.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전면 개편 추진

과제 2.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 및 서비스 확대

1. 기록전문가가 선도하는 기록관리 혁신기반 구축

과제1

국가기록원 조직혁신으로 독립성·전문성 강화

- ◇ '국가기록관리 총괄기관·아카이브'로서의 국가기록원 혁신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 역할 강화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기록관리 혁신(국정과제) 추진체계 구축(1/4분기)

- 기록관리 혁신 총괄 및 법·제도 개선을 지속 선도할 추진기구 구성
 - (조직) '기록원 - 전문가 민관 협업기구*' 설치
 - * 기록관리 현장 전문가·학계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기록관리 혁신 추진
 - (역할)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발굴과제 실천계획 수립·실행방안 마련, 추진상황 모니터링·피드백 등 수행
- 기록관리 혁신 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소관 부서 기능 강화
 - * 기록 평가·분류체계 재구축, 지방기록원 설립·기록관 업무 지원 과제 등 관계부서 인원 보강

□ 국가기록원 혁신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조직 전면 개편(2/4분기)

- 본원(3부)·3관(서울, 부산, 대전)체제 등 우리원 업무·기능 진단*(~3월)
 -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의 '국가기록원 조직·기능 혁신 방안' 권고안을 기초로 조직 진단 및 조직 혁신 워크숍 등 내부 혁신을 위한 토론 병행 추진
- 정책개발·연구, 기록물관리기관 지원·소통, 아카이브 고유기능 중심으로 개편(기록물 평가, 정리·기술, 보존, 서비스 등)(~6월)

□ 기록관리 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형 조직 운영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거버넌스 기구로 위상·역할 강화(~12월)
 - (현행) 총리 소속의 심의·자문기구 → (개선) 대통령소속 의결 기구화 검토
 - ※ '국가기록관리위' 산하 전문·특별위원회(5개) 역할 및 구성·운영개선 병행 검토
- 기록관리 학계·현장 등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상시적인 소통·교류 체계* 마련(연중)
 - * 정책 수립·현안 논의를 위해 사안별·기관 유형별 「협의체」 수시 구성·운영

과제2

국가기록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

- ◇ 기록관리 체계, 절차 재설계 및 전자기록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공기록물법령 전부 개정

□ 기록관리 혁신 우선과제의 선제적 추진

○(과제)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제시 공공기록관리 혁신방안 반영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등 4대 목표, 8대 과제 입법 추진

목표	과제 및 주요 내용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평가도구(지침) 재설계, 기록 처분동결제도 법제화 등 국가 기록평가제도의 개편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기록관 조직·인력배치, 설치 단위 등 기록관 역할·기능 강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촉진 및 지역 민간기록 수집·관리·지원 근거 마련 등 지방기록물관리의 정상화
	기록관 설치, 전문요원 배치 강화 등 헌법기관 기록관리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	기록분류체계 개발 및 기준표 개선, 이관 프로세스 개선 등 기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의 연속성·효율성 확보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보존 재설계·제도화 등 전자기록 장기 보존정책 수립 및 이행
기록정보의 공개/공유 확대와 자원화	공개재분류 개선,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등 기록정보 공개의 체계화 및 서비스 개선

○(추진체계) ‘공공기록관리 개선 협의회*’ 구성 등 협업체계 구축

- * 외부 전문가,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과제별 원내 담당부서 담당자로 구성

○(일정) 원내 실무 검토(1분기) → 외부자문, 기관검토(2분기) →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처 심사(3분기) → 국무회의, 국회제출(4분기)

□ 중장기과제 발굴 및 지속적인 기록관리 혁신 추진

○ 기록물 유형별* 관리를 고려한 개별 시행령·표준 제정 검토

-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이메일, SNS 등 새로운 형태의 기록물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록물법령 정비, 기록관리 내실화

- * 정부산하 공공기관, 교육기관(대학교 포함) 등 기록관리 내실화

과제3

기록관리 현장과 소통·협력 강화

- ◇ 소통을 통한 기록관리 혁신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추진
- ◇ 기록관리 현장 지원 강화 및 국내외 연구 활동 적극 참여

□ 제도 - 현장 간 상시 협력채널 구축

- 국가기록원과 각급 기관간 체계적인 소통·지원 체계 구축
 - 중앙·지자체·교육청·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기관 유형별 전담지원팀 운영
- 국가기록원과 각급기관 간 전문요원 인사교류* 추진
 - 정책 형성과정과 현장 경험 상호공유로 제도의 현업 적용도 제고
 - * 지방기록원(지자체기록관) ↔ **국가기록원** ↔ 중앙부처 등
- 기관 유형별·사안별 업무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 '표준화 작업반',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협의회', '지방기록원 건립 추진협의회' 등
 - ** 도서관·박물관·민간기록관 등 유관기관과 기록관리정보 교류·협력 확대

□ 국내외 기록학계와 연구·협력체계 강화

- 전국기록인대회, 월례발표회, 콜로кви엄 등 학술행사 참여·발표 정례화
- 기록관리 R&D 연구성과를 국내외 학회·세미나 등에서 공유
 - ※ 시청각기록 음성인식 변환연구 - 미국 / 종이기록물 복원사례(세월호 침수기록) - 일본
- 기록관리 국제기구 활동 선도 및 지원 강화
 - ICA, EASTICA(사무총장) 주도적 참여 및 활동 지원
 - ISO 15489* 후속표준, ISO 16175**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 기록관리 개념과 원칙, **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요건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추진

□ 기록물관리기관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

- 자율적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추진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연구용역 추진
- 기록물관리기관 전문요원 배치기준 재정비* 및 계약직의 연구직화 등을 통한 기록관의 기능 및 전문성 제고
 - * 조직규모, 기록물 생산·보존량, 처리과 수 등을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2. 디지털 환경에 지속대응 가능한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과제1

전자기록관리체계 고도화 중장기 전략 수립·시행

- ◇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한 전자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시스템 재설계 등
-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체계 구축 및 전자기록관리 교육 강화

□ 전자기록관리체계 진단 및 중장기 이행 전략 수립

- 전자기록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추진(3월~9월)

< 주요 과제 >

- 현행 전자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조 진단
- 관리조직·운영체계, 기록물 식별·등록·분류·보존·검증체계 재정비
- 기록 '생산 + 관리' 통합 시스템의 프로세스·시스템 재설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통업무 프로세스·시스템 설계
 -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일반 기능 설계, 보급·유지관리 방안
 - 국가기록원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 BPR(업무재설계)·ISP(정보화전략계획) 추진을 위한 T/F* 구성(2월), 운영(~11월)
 - * 본부(정보공개정책과), 우리원(정책기획·정보기반과) 등 관계부서 전문가
- 「전자기록관리체계 고도화 중장기 이행전략」 수립(11월)
 - BPR·ISP 결과를 반영한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적용기술, 시스템 구축 등 단계별 이행계획 마련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기반의 「데이터형 기록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 * 현용(現用)기간중 생산기관 자체관리 원칙 및 시스템·데이터·유관업무·관리이력 등의 항목을 반영한 「기준표 관리체계(system inventory)」 개발 등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매뉴얼」 개발, 기록관리 전 과정(생산·운용·이관·보존) 세부 절차 및 담당자 역할 제시 등

□ 전자기록관리 전문역량 교육 강화

- '전자기록관리 전문교육 모델'에 따른 연차별 교육 실행계획 수립
-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초·중·고급 수준별 맞춤 교육 운영
 - (초급)기초역량 습득→(중급)시스템 등 현안 해결→(고급)종합 전문역량 향상

과제2

클라우드 RMS(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보급

- ◇ 공유·활용 기반의 클라우드 행정환경에 맞는 전자기록관리 체계 기반 구축
- ◇ CRMS의 중앙부처 확산으로 기록관리 효율화 및 기록정보 공유·활용 확대

□ 범정부 클라우드 기록관리(CRMS) 2차 보급 추진

- (대상) 인사처, 기재·교육·산업부, 특허청 등 27개 중앙부처
 - ※ '17년 행안부 등 16개 기관 → '18년 27개 기관 → '19년 국방부 등 5개 기관 완료
- (내용) RMS 자료전환·검증(→CRMS), 클라우드 SW 전환(PaaS, SaaS)

구분	현행(RMS)	→	개선(CRMS)
HW	각 기관별 구축		클라우드 서버 통합 구축·관리
SW	각 기관별 운영		클라우드 RMS로 통합 운영
활용범위	소속 기관내 검색		쑈기관 통합 검색 가능
기능	기록물 인수, 보존, 평가, 이관 등		기존 기능, 온-나라(2.0) 추가사항* 반영

* 부처간 공동결재 문서·메모보고 관리 기능 및 공동결재 문서 관리대장 구현

- (효과) 협업 행정·시스템 공동 관리로 기록관리 전문성·효율성 강화
 - RMS 신규구축·변경 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화(1년→4개월)
 -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과 IT자원 공동활용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 CRMS 운영 안정화 및 RMS 기능 개선

-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안정화
 - 시스템(HW·OS·AP·DB, 공통계정) 고도화 및 CRMS 지원을 위한 전담팀 운영

업무 영역	현행(RMS)	→	개선(CRMS)
시스템 운영·관리	각 기록관담당자, 국정자원 4개과		기록원(기반과), 국정자원 클라우드과
유관시스템 연계 등	각 기록관담당자, 해당 운영과		기록원(기반과), 해당 운영과

※ 기록관담당자는 기록관리 업무 전담 가능, 고도화된 CRMS관련 업무는 기록원 전담

-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능 개선*, 교육 강화**

* 운영기관 의견을 적극 반영, 이관 보존포맷변환 등 기능 개선, ** 기관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실시

3.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체계적 수집·보존

과제1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및 체계적 수집·관리

-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기록분류체계 재설계 및 회의록·속기록 의무생산 대상 회의 확대 지정
- ◇ 국내외 주요기록물의 누락없는 수집으로 기록정보자원 축적

□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기록의 생산·관리를 통해 입증토록” 명문화
 - 업무분류, 기록유형,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재설계*
 - * 공통업무 기준표 강화, 기록유형별 기준표 추가, 보존기간 일괄 구분(현행 7종) 유연화 등
 - 사회적 이슈, 중요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처분동결제도* 시행방안 마련
 - * 미국, 호주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각급기관의 보존기간 경과(예정) 기록물의 진상 규명, 보존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장이 일정기간 폐기 중지를 명령하는 제도
-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 확대* 및 주기적 점검
 - * 주요 정책결정 회의(중앙부처), 주요 투자 심의회·이사급 참석회의(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 중요 국가기록물 중심의 기록물 선별 수집 강화

- 국가적 기록물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통한 기록물 선별·수집
 - (비전자) 각급기관 '18년 이관희망 대상(35만 권) 중 약 7만권 선별·수집
 - ※ 최근 3년간 수집내역 : '15년 7.3만권, '16년 13만권(폐지기관 45만권 제외), 17년 8만권
 - (전자) 중앙행정기관(특별 포함) 약 300만건 이관('17년 계획 239만건 대비 ↑25%)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필수 주요 기록물 수집
 - ※ 軍기록(국방부 기무사 육군 합참 등), 행정기록(국정원 외교부 등), 수사재판기록(검·경찰청 등) 중점 이관

□ 국내외 소재 중요 역사기록물 수집

- 3·1운동*, 한인이주**, 강제연행***, 6·25전쟁, 5.18 민주화운동 등 기록물 수집
 - * 지자체 행형기록, 해외 신문기사 등, ** 카자흐 소재 고려극장 노동영웅 등 시청각기록, 멕시코·쿠바 등 소재 한인이주 기록, ***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재 위안부·강제연행 기록 등

과제2

기록물의 장기보존 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강화

- ◇ 세월호, 세계기록유산 등 중요 기록 복원·보존 및 연구사업 추진
- ◇ 디지털기록 장기보존을 위한 기초 기술정보 DB구축·활용체계 마련

□ 공공·민간 등 중요 기록물의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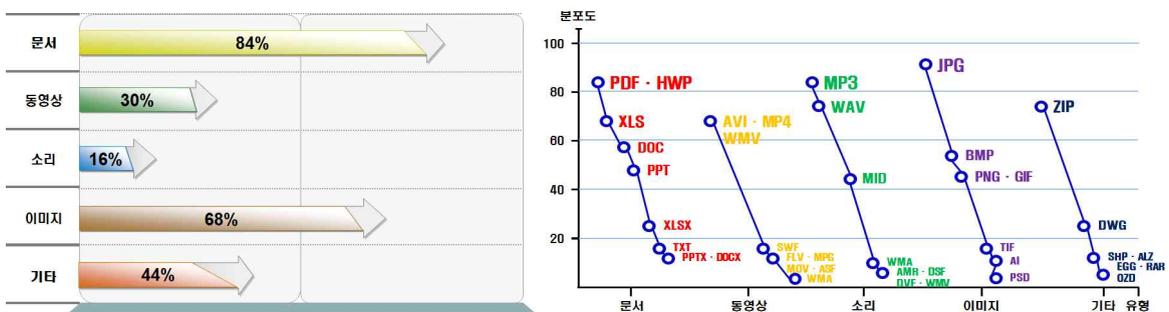
- 세월호 수습 침수·훼손 기록물(111점/16,270여매) 보존·복원 완료(~6월)
-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 우리원 소장 세계기록유산** 보존·복원
 - * 11개 기관 25건(약1,055매) : 대한독립선언서, 손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 상장 등
 - ** 5·18 기록물('11년), 새마을 운동('13년), 이산가족찾기('15년), 국채보상운동('17년)

□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활용(DFR)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시범운영(2~5월) 후, 본격 서비스 개시(6월~)
 - * (기술주식) 기술정보 DB 모니터링 → 변화분석 및 위험인지 / (상황분석) 위험요소 정량화 및 평가 → 보존취약 포맷 식별 / (위험고지) 위험성 확인 통보 → 망실 전 보존방안 검토
- 공공기관 보유 포맷 현황 추가 조사, 보존 취약·우수포맷 도출
 - 보존취약 판정 전자기록 대상 보존처리기능(포맷변환·구동환경재현 등) 개발

< 포맷 현황 > (운영시스템 995개 대상)

- 문서 84%(840개), 동영상 30%(301개), 소리 16%(160개), 이미지 68%(681개), 기타 44%(436개)



□ 중요과제·기술변화 등 중장기 관점의 기록관리 R&D 추진

- 기록관리 R&D 중장기 전략('18~'22년)과 연계한 연구사업 추진
 - 전자·비전자 기록관리 및 활용·서비스분야 주요 과제* 연구
 - * 파일손상 전자기록 복구, 암호화 파일 해결대책, 미소독 기록물 모니터링 등
- 연구성과 활용실태 추적관리 및 성과 활용체계 개선방안 마련
 - ※ 학술논문, 특허 출원·등록, 제도개선·시스템 적용 등 업무 직·간접 활용 등

4.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서비스 환경 조성

과제1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및 정리·기술로 서비스 확대

-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절차 보완 등을 통한 차질 없는 추진
- ◇ 소장기록물 정리·기술 내실화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 효율적 공개재분류 개선을 통한 기록물 공개 확대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주기적 재분류의 실효성 검토
 - “개인정보 보호(6호)” 비공개 기록물의 5년 주기 재분류* 유예 검토
 - * 비공개 기록물(개인정보가 95% 차지)은 재분류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 재분류
- 기록물 성격별 「비공개 상한기간*」 설정 등 공개확대 방안 마련
 - * 생산 후 30년경과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방·안보,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계속 비공개하는 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설정(例 : 개인사후 10년 / 국가안보 60년 등)

□ 비공개 기록물의 주기적 공개재분류 추진

- 비공개기록물 15만권 공개재분류(30년경과 11만권, 30년 미경과 4만권)
 - 공개전환 기록물 목록 홈페이지 공고 및 비공개 기록물 현황 관보 고시
 - ※ '15년 18만권/ '16년 17.9만권/ '17년 15만권(공개·부분공개 82.7% / 비공개 17.3%)

□ 소장기록물 정리(整理)·기술(記述) 내실화 및 직접 열람 확대

- 이용자 중심 ‘주요 사건·정책 기록물 컬렉션’ 시범기술* 추진
 - * 대국민 관심도·활용빈도가 높은 주요 사건·정책 기록물을 중심으로 우리원 및 외부기관 소장기록물 포괄하여 연차별 컬렉션 기술(例 : 5·18민주화운동, 6·25전쟁, 군위안부 기록물, 금융정책 등)
- 일제강점기 기록물(대장류) 색인화로 독립운동가 발굴 등 활용도 제고
 -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등의 필수정보 색인화(성명·생년월일·죄명·사건번호 등)
- 소장기록물 원문서비스 4개년 계획(14~17년) 결과 분석 및 추가 추진(100만건)
 - ※ 총 건수 1,920만건('14년이전 360만건/'14년 209만건/'15년 374만건/'16년 530만건/'17년 447만건)
-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운영
 - *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을 타 부처 이용자가 CAMS에 직접 로그인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서비스 중)

과제2

민관 협업 기반의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및 제공

- ◇ 이용자 관점의 콘텐츠 관리·개발로 기록정보콘텐츠의 민간 활용을 촉진, 공공기록정보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 기록정보콘텐츠 민간 활용 기반 강화

-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기록정보콘텐츠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12월)
 - (현행) 주제설명 중심의 백과사전식 정보제공
 - (개선) 기록물의 내용·맥락정보 등 기본정보 제공에 충실한 콘텐츠 개발
-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방으로 이용자 중심의 기록물 활용 지원 확대
 - 읽고 보는 콘텐츠에서 가공·편집·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구축 방안 도출
- 「저작권 프리존」 운영, 소장 기록물의 자유로운 활용 지원(출판·전사·교재 등)
 - 공공기록물 중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여부 검토 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서비스(시청각 56만건 대상)

□ 다양한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전문가와 함께 읽는 기록」(가칭) 콘텐츠 개발·서비스(분기별)
 - 주요 정책, 사건 기록물에 대한 내용 설명과 기록물의 가치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분석을 함께 서비스
 - 시대·생활상을 보여주는 콘텐츠 개발·서비스
 -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1960년대)」*,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UN수집 사진기록물 컬렉션」*** (가칭) 개발
- * 1960년대 문화영화 영상, 제작계획서 등, **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주제별(47개) 설명 및 관련 기록물, *** 한국전쟁과 유엔군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기록

□ 기록의 지식정보화를 위한 체계적 편찬 추진

- 3·1운동 100주년 기념 「판결문으로 읽는 10대 사건*」(가칭) 발간(12월)
 - * 3.1운동 등 조선말~일제강점기의 주요 역사적 사건(10개) 선정
- 「주요 정책기록해설집」 VI(문화편) 발간(12월)

5.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 및 서비스 확대

과제1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전면 개편 추진

- ◇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 및 효율적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적극 발굴, 법령개정·제도개선 추진

□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전면 개정

- (내용)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제시 대통령기록관리 혁신방안 반영
 - 지정보호 제도 개선, 디지털 아카이브 등 우선과제(4개), 대통령 기록의 공정한 관리방안 등 중장기과제(3개)으로 구분 추진

구분	과제	주요 내용
우선과제 (4개)	대통령기록 지정보호 제도 개선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 지정기록 지정·관리·해제·열람 권한 및 절차 등
	대통령기록 생산기관 기록관리 개선	생산기관 - BH기록관 - 대통령기록관 업무 체계 재정립 등
	디지털기반의 대통령 기록관 모델 정립	디지털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록관리 및 서비스 강화방안 마련 등
	대통령기록관 운영의 중립성·전문성 보장	대통령기록관 전문성 강화(조직, 직제, 권한과 책임 할당, 재교육 등) 등
중장기 과제 (3개)	기록의 정의·범위·기록 성립요건 등 재정립	전자업무환경과 디지털 소통시대 대통령기록 정의와 범위, 성립요건 등
	관리원칙·법령에 부합 하는 업무·기록 시스템 요건, 기술(tech) 정의	통합 전산자원 운용기반 대통령기록·정보·데이터 생산·관리 고도화 등
	정치적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생산·획득·선별·유지·접근·무단유출 예방 등 생산 기관에서의 기록평가·선별제도 전문화 등

- (추진체계) ‘대통령기록관리 혁신팀’* 등 협업 체계 구축
 - * 관련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과제별 담당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일정) 원내 실무 검토 및 개정안 마련(~2월) → 부처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처 심사(~4월) → 국무회의, 국회제출(~5월)

□ 디지털 업무환경 변화 수용을 위한 대통령기록관리체계 혁신

- 대통령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기반 아카이브 모델 정립
 - * 5년 주기 이관, 이관 후 생산기관 부존재, 대통령별 서비스 특화 등
 - 사례 조사, 실태 분석, 시스템 진단, 아카이브 모델 제시 등 연구용역 추진

과제2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 및 서비스 확대

- ◇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지속적 발굴·조사·수집
- ◇ 공개재분류, 지정·비밀기록물 해제, 콘텐츠 개발 등 서비스 확대

□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 발굴·수집

-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인사 구술채록사업 추진
 -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장·차관 등(15명 내외 80시간 이상)
 - ※ 기 구술현황('08~'17년) : 이승만~김대중 정부 인사 총 216명 1190.5시간
- 주요인사 소장 기록물 기증협약 추진
 -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인사 등의 소장 기록물 기증협약 체결 추진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주기적 공개재분류 추진

- 17대 대통령기록물 최초 재분류* 추진
 - * '18년 공개재분류 대상량 : 사전검토 107만건/ 심의 439만건(총 대상량 467만건)
- 16대 2년 주기*(3.1만건) 및 생산 30년 경과**(0.58만건)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추진
 - * 비공개기록물은 이관 5년 경과후 1년 이내 공개여부 재분류, 이후 매 2년마다 재분류(법 제16조제3항)
 - **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후 30년 경과시 공개함을 원칙(법 제16조제4항)
- 전문위 심의 후, 공개전환 기록물 목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해제 및 비밀기록물 재분류 추진

- 2018년 지정 보호기간 만료된 대상 기록물* 선별 및 해제
 - * '18.2.25. 기준, 44천여건(16대 10년 42천여건, 17대 5년 2천여건)/ '18.5.10. 기준, 5건(18대 1년)
- 비밀 보호기간 만료 또는 연장 기록물 재분류(16대 224건, 18대 944건)

□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대통령기록 콘텐츠 개발

- 역대 대통령의 국가정책 관련 기록물 조사 및 콘텐츠 구축(교육분야)
- 온라인 콘텐츠 보완·확대*를 통한 대통령기록물 활용도 제고
 - * 신규 구축(2편 : 정책콘텐츠, 기록으로 보는 대통령), 확대 구축(6편 : 대통령 일정, 대통령 해외순방, 기증기록 컬렉션, 기획전시, 기록갤러리(선물·행정박물), 대통령의 식탁)